

# 새로운 성장 정책의 핵심은 무엇일까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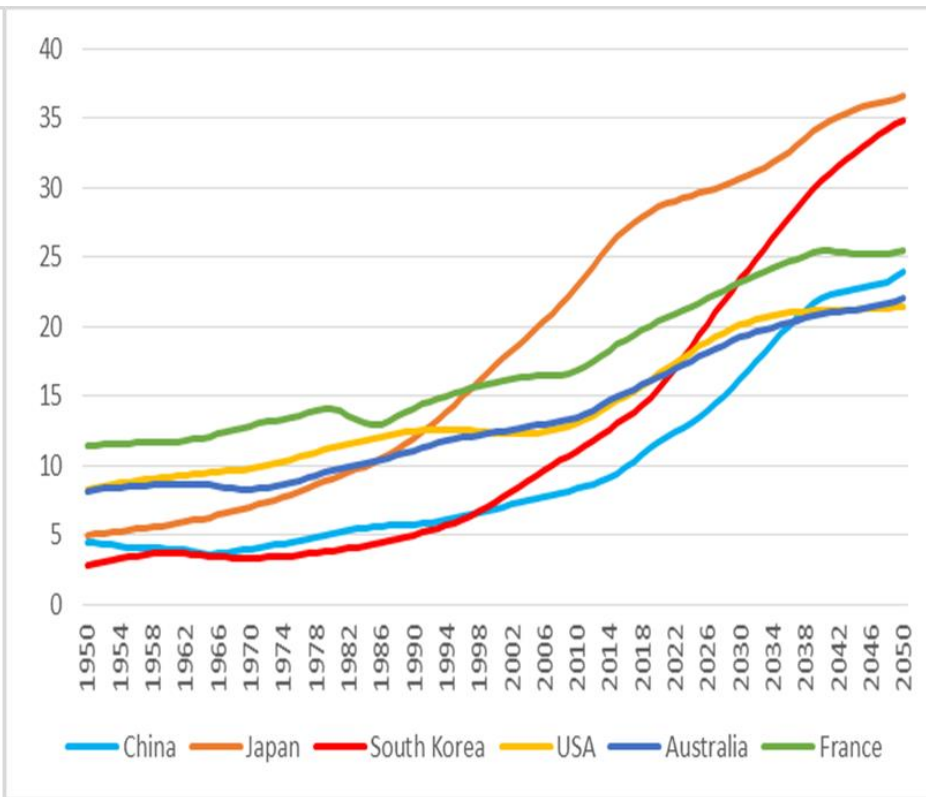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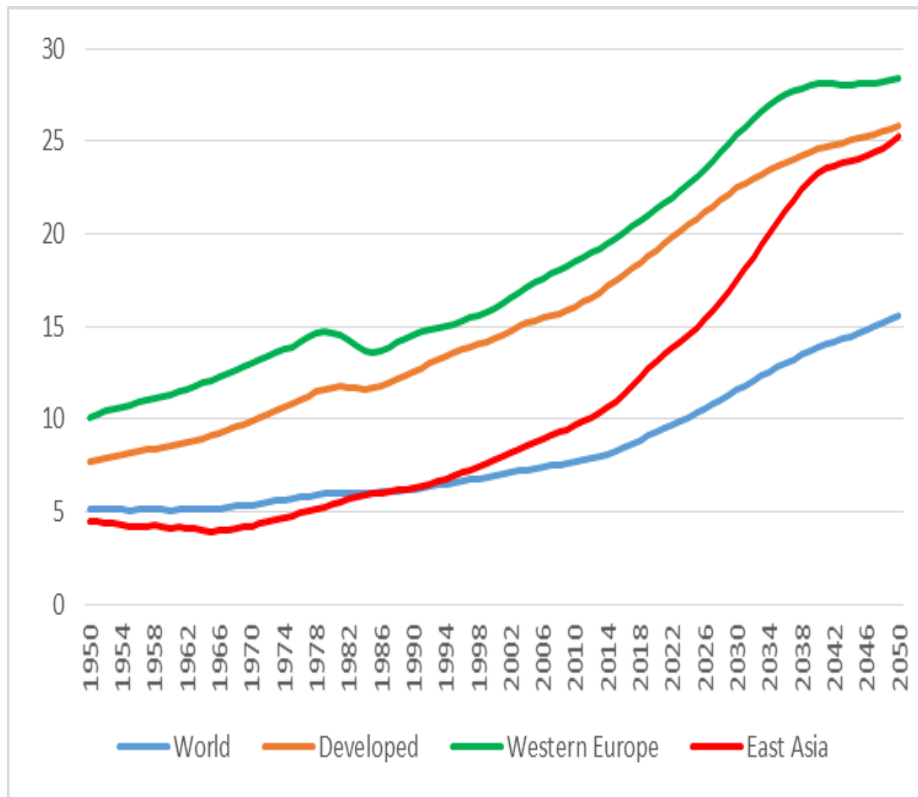
2017. 9. 27.

전성인  
(홍익대 경제학과)

# 목 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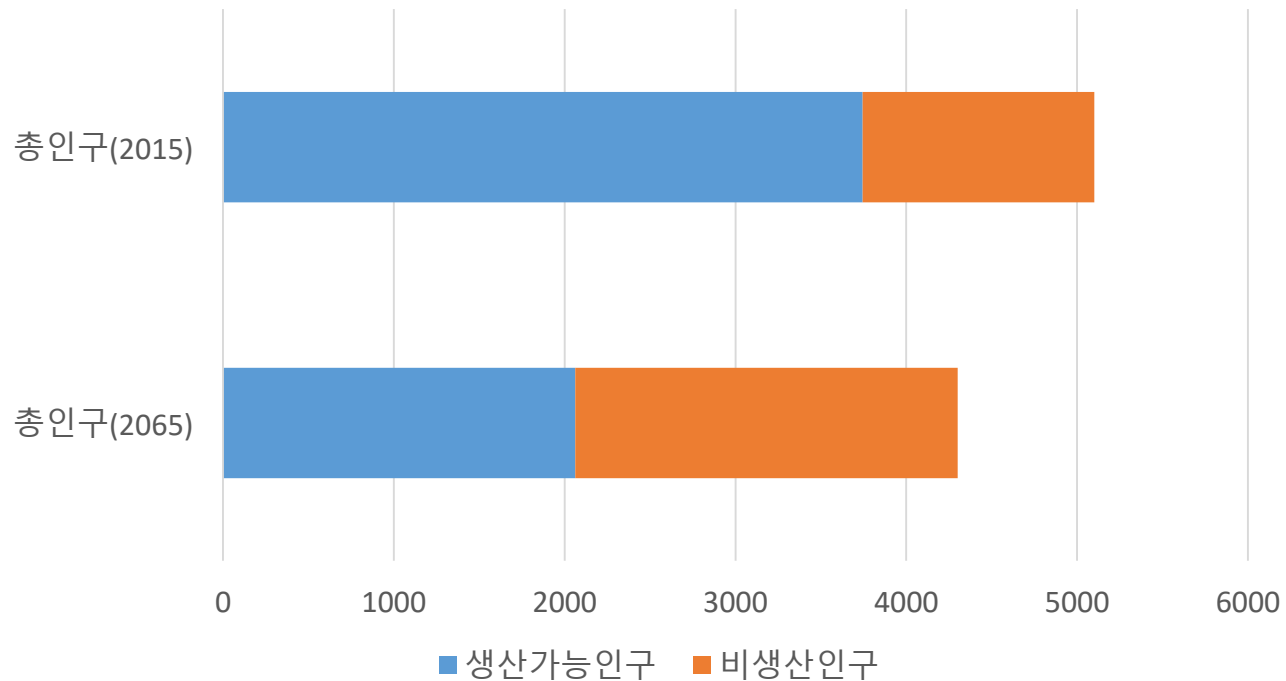
- ◆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환경
- ◆ 어떤 자본을 축적해서 성장할 것인가?
- ◆ 인적 자본의 축적과 경제 민주화
- ◆ 정책 과제
- ◆ 발제자 논문에 대한 토론

# 인류에 대한 새로운 도전: 총인구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



#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

- 생산(가능)인구와 은퇴인구의 구분



# 우리가 직면한 도전의 본질

- 생산 가능인구는 급속하게 절대적으로 감소
- 노령 인구는 급속하게 절대적으로 증가
- 이제 더 이상 총인구 증가율  $\neq$  노동력 증가율
- 노령 인구는 총 유권자의 50%를 이미 상회
- Limited horizon 하에서의 노령인구는 어떤 경제  
적 선택을 할 것인가? (무상급식 vs. 노령연금)

=> 성장 정책은 절대 절명의 과제

# 단순한 성장 모형 되돌아 보기

- 솔로우 성장 모형의 간단한 변형

$$Y = F(eL, K) = (eL)^{1-\alpha} K^\alpha$$

⇒ 여기서  $e$ : 노동의 효율성,  $L$ : 노동투입,  $K$ : 자본투입

$$\Rightarrow y = \frac{Y}{eL}, k = \frac{K}{eL} \text{ 라 하면, } y = k^\alpha$$

⇒ 솔로우 성장모형에서는 장기적으로

$$\Rightarrow k \rightarrow k^*, y \rightarrow y^* = (k^*)^\alpha \text{ 으로 수렴}$$

$$Y^* = eLy^*$$

# 노령화와 경제성장

- 노령화 => 총인구(N)와 생산가능인구(L)의 분화
  - 경제활동참가율  $p = L/N$
  - 단순한 통상적 모형에서는  $p = 1$  가정
  - 노령화:  $p$  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는 뜻 ( $\frac{2}{3} \Rightarrow \frac{1}{2}$ )
- 1인당 국민소득의 변화
  - 단순한 모형에서는  $N=L$  이므로  $\frac{Y}{N} = \frac{Y}{L} = ey$
  - 경제활동참가율을 구분하면  $\frac{Y}{N} = \frac{eLy}{N} = e\left(\frac{L}{N}\right)y = epy$
  - 노령화 경제는  $p$  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므로  
 $\Rightarrow$  (주어진  $e$  하에서) **1인당 국민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**

어떤 자본을 축적해서  
성장할 것인가?

노동친화적 성장 정책



# 자본 과잉에 대한 깊은 문제의식

- 현재 우리는 자본 과잉 상태에 직면
  - 저금리, 저투자, 사내 잉여자금 축적 증가는 모두 자본 과잉의 전형적 현상
  - 따라서 실물 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은 비효율적인 행위에 상을 주고, 귀중한 사회적 자원을 낭비하는 것
- "실물투자=善"이라는 과거 개발연대의 발전 경험을 버려야 성장 가능
  - 과거 박정희 시절에는 자본은 희소하고 노동은 풍부
  - 이에 따라 산아제한 등으로 노동의 증가는 억제하면서 자본 축적을 통한 성장을 추구

=>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**노동과 인적 자본 형성**에 대한 투자를 장려해야

# 노동친화적 성장 정책

- 노동친화적 성장 정책의 핵심은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, 인적 자본의 형성을 촉진하는 것
  - 노령화에 의해 취업자수 증가가 정체/감소되는 상황에서 노동투입 증가를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취업자의 인적자본을 증가시키는 것
  - 취업자의 learning by doing
  - 취업자 보유 인적 자본의 훼손 방지
  - 인적 자본 투자에 필요한 시간적, 물적 토대 부여
  -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기업/사회 문화
- 노동친화적 성장정책은 자본축적에 대한 현재의 정책적 지원을 축소하는 방향 전환을 수반할 수밖에 없음
  -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이용 차원
  - 다만 인적 자본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물적 자본 축적의 동기도 유발

⇒ 인적 자본과 물적 자본의 축적이 동행하는 성장 경로 도달

# 인적 자본의 축적과 경제민주화

## 경제민주화는 성장 정책

# “을 살리기”는 성장 정책이다!

- 노동자에게 분배 몫을 늘리는 것은 성장 정책
  - 과거: 자본축적을 저해하는 일종의 “낭비”로 봄
  - 현재: **인적 자본 축적을 위한 투자재원의 배분**
- 하청업체와 협력업체의 권리 신장은 성장 정책
  - 생산현장에서 습득할 수 있는 인적 자본의 축적을 장려하는 투자행위
- 세대친화적 증세를 통해 청년고용에 활용하는 것은 성장 친화적 정책
  - 증세 부담이 가능한 한, 세대간 왜곡을 없애도록 설계
  - 청년층의 인적 자본 축적 기회를 제공

# 인적 자본 투자의 수익률 제고

-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자발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적 자본 투자에 대한 보상 증가 + 인적 자본 투자의 비용 절감 필요
  - 투자의 기대수익이 커야 투자 활발히 진행
  - 인적 자본 투자의 수익률이 가장 직접적으로 구현되는 변수는 (숙련 노동에 대한) 임금
  - 인적 자본 투자의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단순히 교육비 절감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, 투자를 위한 “심신의 여유”도 중요
- 노동소득분배율을 제고하는 것은 성장 정책
- “저녁이 있는 삶”은 성장 정책

# 협력업체에 대한 과도한 쥐어짜기

- 재벌의 쥐어짜기는 협력업체 차원에서의 독립적인 투자나 자본 축적을 불가능하게 함
  - 최종 생산물을 만드는 주력 계열사와 수많은 하청업체 간에 동반성장이나 낙수효과는 완전히 실종
  - 저성장 기조가 정착하고 이윤율이 하락하면서 오히려 협력업체/하청업체에 대한 수탈은 더욱 기승
  - 불황시에는 고통 분담, 호황시에는 이윤 독식
- 협력업체 쥐어짜기는 인적 자본 축적을 방해
  - 물론 이런 현상은 그것 자체로도 부당
  - 협력업체 차원에서 별도의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박탈하여 인적 자본 축적 방해

# 노동과 관련한 중요 입법 과제

## 노동이사제 도입

- 노동자가 추천한 사람을 주총에서 이사로 선임
- 경영자에 대한 감시 역할
- 회사의 중요 회계 정보를 노동이사제를 통해 노동자와 공유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
- 회사의 회계적 성과를 정확히 파악해야 비로소 회사와 노동자 간에 대등한 교섭이 가능
- 미국식 사외이사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황에 대한 유일한 실질적 대안

# 하청기업과 관련한 중요 입법 과제

## 법인세법 개정을 통한 강제적 낙수 효과

- 당기순이익이 양수인 경우 그 일정 부분을 제1차 하청기업들에게 구매액에 비례하여 배분
- 제1차 하청기업은 배분받은 금액을 하청기업 의존도에 따라 다시 제2차 하청기업에 의무적 배분
  - 하청기업 의존도 =  $\frac{\text{하위 하청기업으로부터의 구매액}}{\text{상위 기업에 대한 납품액}}$
- 더 이상 하청기업이 없을 때까지 의무 배분을 아래로 계속
- 의무 배분 거부 기업은 상부로부터의 수령액(최상위 기업 경우에는 의무배분대상액)을 국가가 법인세로 환수한 후,
- 거부 기업과 거래한 하부의 하청기업에 각 하청기업의 구매액 비율에 비례하여 배분



# 서민을 위한 정책 과제

## 가계 부채 탕감

- 부채 탕감은 가계의 지출 가능 규모를 증가시킴
  - ⇒ 가계의 소비 증가와 경기 활성화 달성 가능
  - ⇒ 가계의 인적 자본 투자를 위한 자원 제공
- 저소득 · 저신용 · 다중채무자의 신용채무 소각
  - 상환 무능력자에 대한 무자비한 추심은 그것 자체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
  - 이들을 경제활동 현장에서 격리시킴으로써
  - 이들이 보유한 인적 자본을 사실상 증발 시키는 것
  - 언필칭 “도덕적 해이” 논란은 채권자가 이미 대출 시점에 신용도를 평가하고 부도 위험을 반영한 가산 금리를 보험료로 징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 없음

# 노동친화적 재원조달: 부동산세

- 부동산세: 성장 친화적 조세
  - 소득 창출 행위에 대한 처벌이라는 부작용 최소화
  - 부동산 가격(자본의 요소가격) 하락 유도
- 부동산세: 세대 친화적 조세
  - 주로 노동을 보유한 청년 계층에 대한 세부담 절감
  - 노년 복지비용을 “부자 노년층”에 대한 과세로 충당
- 적용 례
  - 가계, 기업 구분 없이 모든 경제주체가 보유한
  - 모든 부동산(토지, 건물, 주택)에 과세
  - 그 대신 법인세, 소득세 대폭 인하
  - 준거: 국민주택규모 1가구 1주택 중산층 세부담 불변

# 발제자 논문에 대한 토론

- 전통적 경제학 이론에 근거한 훌륭한 분석
- 다만
- 무엇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는가?
- 인구구조가 호의적이었던 과거의 경험이 과연 현재에도 그대로 작동할 것인가?
- 인적 자본 축적에 대한 고민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과제
- 제조업, 수출 부문을 성장 정책의 관점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?